

# 민주 '현역 컷오프' 통보 막판 고심

### 공관위, 지연 가능성 시사... 오늘 2차 경선 지역구·후보자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통보 시점을 '2월 초'로 잡았다가 '설 연휴 이후'로 늦췄고, 지난 13일에는 선거구 확정 미비를 이유로 더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총 31명으로 알려진 '하위 20%' 현역 의원들은 경선하더라도 점수의 20~30%가 깎이는 터라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관위가 명단 통보에 몸을 들이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여러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이 막 출범해 주목받는 만큼 컷오프 대상자의 대거 이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명단 통보 시점을 늦출수록 당내 원심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실제 개혁신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들의 합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미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서 거대 양당 다음으로 기호 3번을 확보하려면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하위 20% 의원들의 합류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예측하긴 어렵지만 많이 오면 좋겠다"며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주 없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 작업의 속도가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것도 명단 통보 시점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는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이른바 '이삭줍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잖이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공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공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쪽 속도에 맞춰 우리도 좀 늦어지는 것"이라며 "타이밍을 조정 중이지만 다음 주에는 임 위원장이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뜰이나 공천을 둘러싸고 민병(진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신경전이 거센 상황에서 '하위 20%' 명단을 서둘러 통보해 파열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통보 지연 배경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15일 2차 경선 지역구 및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경선 지역구 역시 당내 큰 논란이 없는 지역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 관계자는 "내일 발표될 경선 지역이나 경선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 공천작업이 당내 통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당 창당 선언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온 조국 "제 길을 가겠다"

### "윤 정권 조기 종식 위해 연대"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외 다른 정당과의 연대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신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윤석열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는 정당은 당연히 연대하고 손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천명계' 인사로 꼽히는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던 인연을 이유로 참석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조국 신당'은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다"며 "박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나 저나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문제를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조만간 창당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육천진 대주교와 김희중 대주교를 차례로 예방하고 오후에는 전남 목포로 이동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광주 광산갑, 네거티브로 시끌

### 이용빈 "박군택 선거법 위반 수사중"... 박군택 "사실 무근"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지역 발표가 늦어지면서 광주지역 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간 '네거티브'가 과열되는 모양새다.

특히 광주 광산갑의 경우 공천 신청자가 2명뿐인 만큼 민주당 공관위가 2인 경선지역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커보였지만, 발표를 늦추면서 네거티브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군택 예비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이자 기자인 A씨는 박 예비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홍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 예비후보 홍보 기사와 상대 후보 비방 등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대 후보에 대해 지속적인 음해성 보도를 해온 A씨는 기사를 생산하고 SNS에 유포하는 대신 박 예비후보 또는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대가성으로 받았다는 의혹이다"며 "자신의 선거 운동을 위해 언론사 사장을 법무법인의 홍보실장으로 위장 채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이 의원이 지역위원회 사무직원에게 후원회 사무원 뭉으로 급여를 제공한 후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의원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당대표 법률 특보인 박군택 예비후보는 "이 의원은 A씨를 법인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A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혹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라"며 "상대를 향한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깨끗한 선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양측의 의혹에 대해 민주당 윤리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 김병도 "유권자 알 권리 보장 'TV 토론' 해야"

###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

김병도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예비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입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위한 TV토론회 개최를 주장하며 인지도 쌓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호남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이지만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SNS 활용, 전화를 이용한 이름 알리기 정도가 경선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보자의 입을 통해 정견, 정책 및 공약, 비전, 가치와 철학 등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

정한 점을 들어, TV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윤 총선당 관련, 민주당은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서 지역 상황에 따라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경선이 시대정신, 민주당 정신, 호남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지역민의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만큼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등을 지냈고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